

北韓의 經濟開發戰略의 構造的 問題點

朴 貞 東

(本院 研究委員)

◇ 要 約 ◇

北韓의 經濟開發戰略의 諸特徵은 저렴한 農產物價格에 의한 農業部分에서의 剩餘, 低賃金에 의한 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剩餘를 가지고 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農民, 都市勞動者 兩側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低農產物價格→低賃金→蓄積資金擴大→再投資→生産量增加→消費水準 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農村部分부터 보면 農村協同組合에서의 所有制度, 分配制度의 問題로 인해 農民의 勤勞意慾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結果 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都市部分에서는 人民들의 低消費의 結果로 축적된 資金이 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自給自足指向型的 重工業化는 重工業과 關聯産業 相互間의 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企業이 國家의 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國營企業管理體制의 非效率性도 지금의 北韓經濟를 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主要한 要因으로 작용했다.

農業生産의 停滯, 重工業을 위한 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投資構造, 企業管理體制의 非效率性은 北韓의 計劃經濟循環構造를 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循環構造 그 自體를 마비시키는 事態로까지 발전했다.

循環構造의 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北韓은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를 設置하고 새로운 資金蓄積源으로서 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北韓의 經濟 循環構造의 痲痺를 풀 수 있는 根本的인 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發端인 農村의 經濟體制改革, 農·輕工業을 위한 重工業, 國營企業의 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惡循環構造를 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補完的인 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 머리말

1991년 12월 북한의 정무원(內閣)은 러시아공화국 沿海州지방, 중국 吉林省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나진·선봉지구에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對外經濟開放으로의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北韓이 과거의 自力更生路線으로부터 西方側 依存型的 經濟노선을 걸음으로써 근대화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政策變化에서 누구나 가지는 의문은 정책 변화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저개발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農村·都市 2부분 경제발전모델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의 諸特徵과 그 문제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즉 1945년 사회주의정권 성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계획경제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은 과연 어떠한 경제 정책을 실시해 왔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失敗로 끝나버렸는가 하는 문제이다.

II. 低開發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農村·都市 2部分 經濟開發모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諸特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실시함과 동시에 低開發國家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를 분

석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비교경제체제론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機能比較(즉 市場的 配分과 計劃的 配分을 비교하여 논하는 것) 혹은 사회주의 경제의 각종 형태간의(集權的 사회주의, 分權的 사회주의) 비교를 논하는 比較經濟體制論만으로는 低開發의 市場經濟와 行政制度, 그것과 병행해서 존재하는 慣習經濟 등의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低開發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의 農村·都市 2部分 經濟發展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A. W. Lewis의 2중경제형개발 모델을 저개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실정에 맞게 筆者 나름대로 수정한 것이다.

1. 모델의 諸假定

(1) 物的 生産手段의 共有와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가 실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수단의 공유는 전인민소유와 집단소유를 의미한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는 경제적 선택의 주요 부분이 중앙에서 실시되고, 하부기관에는 執行機能만이 부여된다.

(2) 一國의 經濟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農村部分(rural sector)」과 근대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都市部分(urban se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도시 양부분 모두 失業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불완전 이용이라는 문제는 존재한다.¹⁾

(3) 노동력 배분에 관해서는 도시부분의 過剩勞動力이 완전히 흡

1) 노동력의 불완전 이용이라는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즉 新정권 설립기에 북한은 적지 않은 실업자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정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이들 실업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에는 실업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념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업이라는 사회문제를 없애기 위해 도시·농촌 양부분 모두 필요 이상의 노동력을 과잉고용노동력이라는 형태로 흡수했다.

수되기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자의 이주를 규제한다.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농업부분이 공업부분보다 資本과 勞動의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임금은 勞動市場의 需給關係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총생산물 중에서 축적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총분배분)을 구성원 각각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결정된다.

(5) 축적분은 전부 再投資되는데 그 비율(농촌·도시 양부분)은 국가의 投資政策에 의해 결정된다(총재투자분(T)=농촌부분의 가중치(Σ_1) $\times T$ +도시부분의 가중치(Σ_2) $\times T$, $\Sigma_1+\Sigma_2=1$, $0<\Sigma_1<1$, $0<\Sigma_2<1$).

(6) 過剩勞動力이 없어질 때까지는 기술수준이 일정하다. 여기에서 기술수준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각 생산기에 있어서의 適正雇傭量(임금=한계노동생산성) 때의 노동자 1인당 資本·勞動比率이 일정함을 말한다.

2. 農村·都市 各部分 經濟開發戰略

가. 農村部分 經濟開發戰略

[圖 1]은 농촌부분의 확대재생산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어진 농지에 OL_a 의 노동력을 투입해 Q_a^1 의 총생산물을 수확한다고 하자. 이때 한계노동생산성, 즉 총생산물곡선에의 접선치가 임금과 같아지는 노동투입량은 L_a^1 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이론상으로는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고용이 결정되고 그 이외의 노동력은 실업상태에 있다. 따라서 $QL_a - L_a^1$ 의 노동력은 한계노동생산성이 임금 이하이기 때문에 실업인구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한계노동생산성의 高低에 관계없이 전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QL_a 의 총노동력이 Q_a^1 의 총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QL_a - L_a^1$ 의 노동력은 취직은 하고 있지만 자본의 부족에 의해서 노동력이 불완전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즉 과잉고용노동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과잉고용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생산물 가운데서 가능한 한 축적분을 늘려서(국가에서 정하는 「분배임금」(W_a)은 가능한 한 줄이고), 그것을 차기의 생산확대를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기의 총생산물곡선을 QL_a^1 에서 QL_a^2 로 확대시킨다. 이러한 확대재생산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 과잉고용노동력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도 이룩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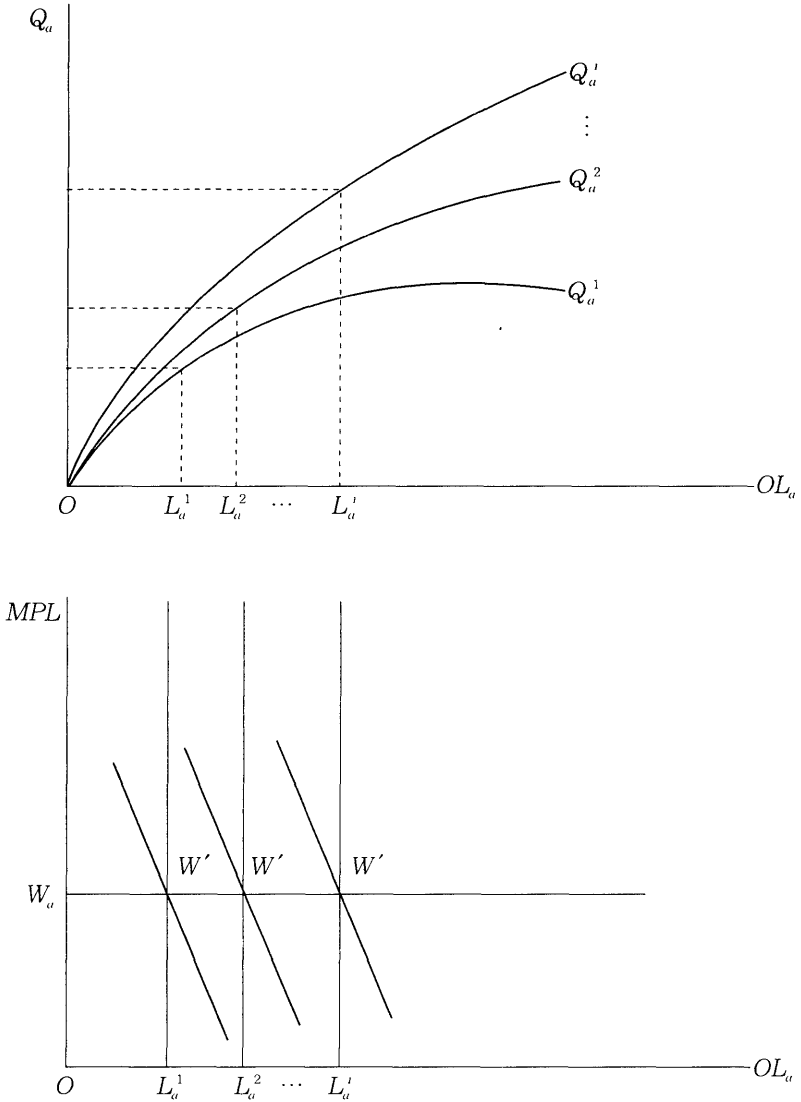
나. 都市部分 經濟開發戰略

도시부분의 생산요소는 자본(K)과 노동(L)이다. [圖 2]는 총노동력(QL_b)과 각 시기의 자본투입량($K_b^1, K_b^2, K_b^3 \dots$)을 결합시켰을 때의 총생산물곡선의 궤적 Q_b^1, Q_b^2, Q_b^3 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의 임금수준(W_b)도 농촌부분과 마찬가지로 「분배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도시부분에서도 농촌부분과 마찬가지로 과잉고용노동력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총생산물 가운데서 가능한 한 축적분을 늘리려고 한다. 축적분은 차기 생산확대를 위한 잉여로 사용되고 이러한 재투자에 의해서 총생산물곡선은 Q_b^1 에서 Q_b^2 로 상향이동한다.

3. 經濟開發모델의 示唆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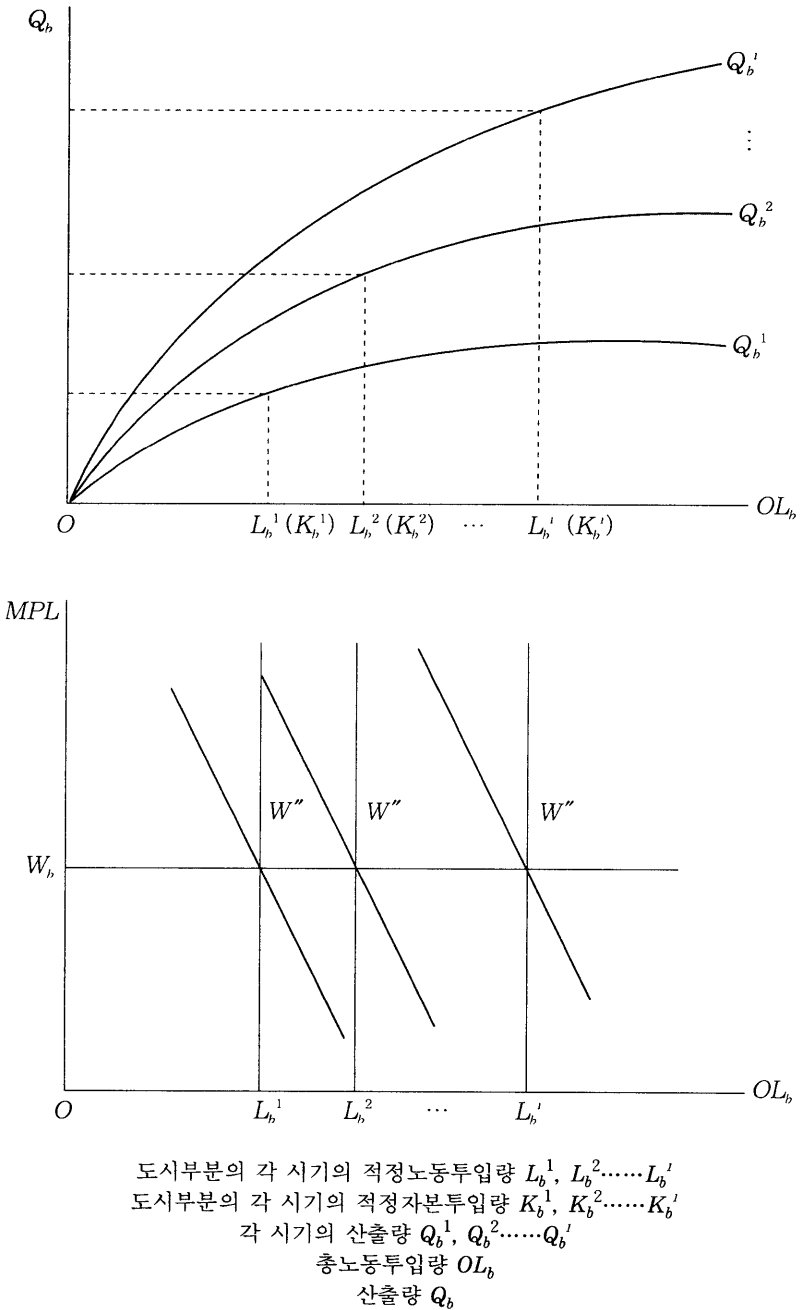
농촌, 도시 2부분 경제발전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는 초

[圖 1] 農村部分의 擴大再生産過程



농촌부분의 각 시기의 적정노동투입량 $L_a^1, L_a^2, \dots, L_a^3$
 각 시기의 산출량 $Q_a^1, Q_a^2, \dots, Q_a^3$
 총노동투입량 OL_a
 산출량 Q_a

[圖 2] 都市部分의 擴大再生産過程



기상태의 과잉고용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생산물 가운데서 가능한 한 축적분을 늘려서(국가에서 정하는 「분배임금」은 가능한 한 줄이고), 그것을 次期の 생산확대를 위한 잉여로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총생산물 곡선을 上向移動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擴大再生産過程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과잉고용노동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도 이룩한다는 전략이다. 모델이 시사하는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1) 人口政策 :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밀돌지 않으면 안된다.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능가할 경우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한 총분배분은 인구증가분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再投資額은 줄어들고 成長率은 제한받게 된다.

(2) 資本蓄積 :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생산요소 가운데에서도 資本의 不足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消費分은 가능한 한 줄이고 蓄積分을 높이는 정책을 취한다. 이러한 성장패턴을 취하는 이유는 현재의 평균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분배를 장래에 구하기 때문이다.

(3) 生産方式 :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기까지는 농촌·도시 양부분 모두 풍부한 노동력에 의거한 생산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노동력 이동은 도시부분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내(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도시부에서의 就職可能性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노동력을 위한 식량도 농촌부분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에서 노동력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킨다.²⁾ 그리고 이 시점에 도달하면 농촌의 생산방식은 지

2) 도시·농촌의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농촌부 : 농촌의 每期 투자자본(K_a^t)이 K_a^t (농촌부의 과잉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의 투자자본량)가 되기까지는 $A_a(K_a^t)$ 시점의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가 B_a^t (농촌부의 현실투자노동량에 의한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보다 크다. 과잉고용노동량이 없어지면 $K_a^t=K_a^t$, $A_a=B_a^t$ 로 된다.

금까지와 같은 풍부한 노동력에 의거한 生産擴大가 아니고 農機械 등을 이용한 勞動節約的인 生産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촌·도시 양부분 모두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도시부분에서도 지금까지의 풍부한 노동력에 의거한 生産확대가 아니고 노동절약적인 技術進歩를 통해서 生産性を 높이고 生産構造를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Ⅲ. 經濟開發戰略의 失敗와 그 要因

북한의 경우 저농산물가격→저임금→저소비→고저축의 소위 ‘합리적 저임금제’로 불리는 資本蓄積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國家財政收入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중국보다 훨씬 높다(表 1 참조). 농민·도시노동자 양측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축적 메커니즘은 이론적으로는 저임금→축적자금확대→재투자→생산량증가→소비수준증가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計劃經濟 循環構造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基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循環構造 그 自體를 痲痺시키는 事態로까지 發展했다. 1990년 이후 6년간 계속되는 마이너스成長과 國營企業 稼動率 30%라는 數値가

도시부 : 도시부에서 K_b^i (도시부의 每期 투하자본)과 K_b^i (도시부의 과잉고용 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의 투자자본량)가 같아지기까지는 A_b (도시부의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의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가 B_b^i (도시부의 현실 투자노동량에 의한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보다 크다. $K_b^i=K_b^i$ 가 되면 $A_b=B_b^i=B_b^i(L_b^i)$ 와 K_b^i 가 투하되었을 때의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의 관계가 성립. 여기서 도시·농촌 양부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도시부의 과잉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A_b=B_b^i=B_b^i$)이 농촌부보다 빨리 온다. 그것은 공업쪽이 농업보다 자본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表 1〉 財政收入의 對GNP比率

	1990	1991	1992	1993
북한	72.2	75.5	88.0	92.0
중국	18.7	17.8	17.0	16.2
남한	18.6	17.9	18.7	18.6

資料：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指標集』, 1996.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94.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4.

〈表 2〉 北韓의 穀物需給推定(1989~95)

(단위 : 천M/T)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 수요 ¹⁾	6,000	6,200	6,400	6,500	6,580	6,670	6,720
주식용 ²⁾	4,219	4,359	4,500	4,570	4,627	4,690	4,725
비주식용 ²⁾	1,781	1,841	1,900	1,930	1,953	1,980	1,995
총 공급	5,901	6,343	6,081	5,347	5,358	4,484	5,018
전년생산 ³⁾	5,210	5,482	4,812	4,427	4,268	3,884	4,125 ⁴⁾
순수입 ⁵⁾	691	861	1,269	920	1,090	600	893 ⁶⁾
공급부족	99	-143	319	1,153	1,222	2,186	1,702 ⁷⁾

註 : 1) 농촌진흥청. 단, 1990년은 89년과 91년의 평균치.

2) 1991년은 농촌진흥청 추정치. 나머지는 총수요에 91년의 주식용과 비주식용 비율 적용.

3) 농촌진흥청.

4) 수해로 인한 94년도 생산분 재고손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임.

5) 김윤근, 「북한의 식량난, 그 배경과 전망」(『통일경제』, 1995. 11)에서 인용.

6) UN보고서에서 인용. 북한이 확보한 쌀수입(한국 15만톤, 일본 50만톤의 지원 쌀과 태국으로부터 수입 확보한 쌀)만 계상하였음. 일본의 지원 쌀 50만톤 중 10만톤은 95년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반면, 중국 등으로부터의 기타곡물 수입규모는 10만톤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7) 북한이 UN조사단에 보고한 재고손실 62만6천톤 중 50%가 94년 생산분이라고 가정하면 부족규모는 200만톤에 달함.

〈表 3〉 1996년도 穀物需給展望

(단위 : 천M/T)

	북한 당국 ¹⁾	FAO/WFP ²⁾	정 부 ³⁾
총 수요 (A)	7,639	5,988	5,530 ⁴⁾
주 식 용	4,869	3,688	-
비주식용	2,770	2,300	-
실제생산 (B)	3,764	4,077	3,450
당초예상	5,665	4,967	-
홍수피해	1,901	890	-
생산부족(A-B)	3,875	1,911	2,080

註 : 1) UN조사단보고(1995. 9. 12).

2) FAO/WFP 조사단보고(1995. 12. 28).

3) 『조선일보』(1996. 1. 18).

4) 정상수요 673만톤에서 소비절약분을 감안한 실제수요.

〈表 4〉 北韓의 1차에너지 供給 및 最終에너지 소비

(단위 : 천톤)

		1985	1989	1991	1992	1993	1994
공 급	석 탄	29,542	30,866	25,052	23,960	23,121	22,113
	석 유	3,094	2,603	1,991	1,631	1,461	1,011
	수 력	2,748	3,351	3,358	3,172	2,971	3,039
	신 탄	920	947	967	981	994	1,008
1차에너지 공급		36,304	37,767	31,368	29,744	28,547	27,171
소 비	석 탄	23,266	24,653	19,749	18,963	18,671	17,736
	석 유	2,848	2,322	1,768	1,429	1,289	850
	수 력	1,849	2,135	1,923	1,806	1,616	1,638
	신 탄	920	947	967	981	994	1,008
최 종 소 비		28,884	30,055	24,407	23,179	22,570	21,233
부 문 별 최종소비	산 업	24,713	26,186	21,055	20,145	19,730	18,723
	수 송	2,098	1,683	1,292	1,044	942	622
	민 생	2,073	2,186	2,062	1,989	1,897	1,888

註 : ERINA 추계 내부자료를 인용. ERINA 자료는 기본적으로 통일원 추정치에 의존하며 추계 파악이 용이하므로 ERINA 자료를 이용.

이를 端的으로 立證해 주고 있다. 穀物生産量도 1989년에 548만톤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413만톤으로 줄었다. 특히 1995년에는 洪水로 인한 水害로 經濟全般에 걸쳐 큰 被害를 보았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農業生産의 減少(北韓發表: 190만톤)는 가뜰이나 어렵던 食糧事情을 더욱 惡化시키고 있다(表 2 참조). 나아가 北韓의 發表에 따르면 1996년도에도 387만톤의 生産不足(總需要-實際生産)이 예상되고 있다(表 3 참조).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약 28%가 減少한 에너지 供給(減少分の 약 80%는 石炭의 供給減少에 起因함)도 지금의 經濟難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供給의 減少는 특히 發電量의 減少를 惹起함으로써 産業, 輸送, 民生 등 經濟全般에 심각한 影響을 주기 때문이다(表 4 참조).

循環構造的 痲痺로 惹起되는 이러한 問題點은 海外에서의 輸入으로 臨時彌縫策은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北韓의 外貨事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극히 심각하다. 1994년 현재 北韓의 外債는 106.6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北韓 GNP의 50%를 超過하는 外債規模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北韓의 信用度는 135개국 중 133位圈으로서 더 이상의 海外借款導入도 어려운 實情이다. 수출은 외화획득의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나 북한의 수출은 1990년대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는 구소련 등 해외시장의 수입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즉 수출의 부진은 루블화의 평가절하, 경화결제요구, 북한경제의 생산력 약화, 북한상품의 경쟁력 저하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³⁾

3) 최근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1995년 상반기동안 주요 5개국(중국, 일본, 러시아, 홍콩, 독일)과의 교역실적은 오히려 전년대비 6.2%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주요 5개국에 대한 수출이 24% 감소함으로써 무역적자는 1995년 상반기에만 약 1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축적메커니즘의 마비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요인은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요한 것으로서는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協同農場의 所有制, 分配制의 문제로 인한 농민의 勤勞意慾의 喪失 : 현재 북한의 농업부분은 1960년대의 협동농장체제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집단주의를 전제로 한 所有制·分配制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직접 개인에게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는 농민의 근로의욕을 크게 상실시켰다고 볼 수 있다(表 5 참조). 집단주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일한 정도의 평가, 농민들이 일종의 副業으로 경영하는 텃밭의 비활성화, 農·工產物간의 협상가격차의 심화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⁴⁾

(2) 농민들의 근로의욕의 저하 속에서 축적된 그나마의 자금도 실질적으로는 중공업, 특히 軍事部分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重工業化症候群」만을 초래하게 되었다(表 6 참조). 自給自足指向型的 중공업화는 중공업과 관련산업 상호간의 수요만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즉 제철, 비철금속, 중기계 등은 철도, 광산 등의 관련산업과는 생산물을 상호 교환하지만 전통적 기술에 의한 농업, 농촌공업, 중소기업과는 거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해 행해진 높은 축적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인민의 노력은 결국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라는 投資政策으로 인해 그 投資效果가 인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지 못한 것이다. 도시노동자 임금의 停滯 혹은 低下, 농업생산의 저하, 농민의 피폐는 이러한 악순환 메커니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 기업운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도 북한의 국영기업관리체제

4) 前北韓農業科學院 研究員이었던 리민복 씨에 의하면 協同農場의 全體 生産額 減少 가운데 약 60~70%가 農民들의 勤勞意慾의 低下에 起因한다고 한다.

〈表 5〉 北韓의 栽培面積 1ha당 生産量

(단위 : M/T, %)

	1989	1990	1991	1992	1993
북 한	3.17	2.78	2.78	2.69	2.45
남 한	4.15	3.98	3.99	4.20	3.80
남한/북한	1.3	1.4	1.4	1.6	1.6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指標集』, 1996.

〈表 6〉 軍事費의 對GNP 比率 및 1人當 軍事費支出 規模

(단위 : 달러, %)

		1990	1991	1992	1993
對 GNP 比率	남 한	4.0	3.8	3.7	3.6
	북 한	21.5	22.4	26.3	27.4
1人當 軍事費	남 한	226.2	244.8	256.3	270.6
	북 한	228.4	232.9	248.0	248.2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指標集』, 1996.

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관리제도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a) 기업의 경영활동은 주로 上級 管轄機關의 命令에 따른다. 행정기관은 기업에 지령성 투입산출지표를 하달한다. (b) 所得分配에 있어서 기업은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직원은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c) 행정기관과 기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垂直的인 從屬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관리로 企業과 社會의 分業關係는 발전하지 않게 되고, 商品流通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供給, 生産, 販賣 사이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투자를 반복하는 악순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

(4)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평균 5.2%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人口增加率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증가한 인구가 生産者보다는 消費者로서 기능하는 편이 크게 되면 임금이 以前보다 낮아지지 않는 한 인구증가분만큼 分配分은 증가하게 되고 蓄積分은 감소하고 經濟成長은 더욱 더 제한받게 된다. 최근 들어 食糧難을 비롯한 인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부진한 경제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인구증가율도 그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left(\frac{\dot{y}_t}{y_t} = \frac{\dot{Y}_t}{Y_t} - \frac{\dot{P}_t}{P_t}, y_t = 1인당 GDP, Y_t = GDP, P_t = 인구\right)$$

〈表 7〉 南·北韓의 人口成長率과 經濟成長率의 比較

		1990	1991	1992	1993	1994
북한	인구증가율	1.61	1.42	1.40	1.38	1.36
	경제성장률	-3.70	-5.20	-7.60	-4.30	-1.70
남한	인구증가율	0.99	0.93	0.91	0.90	0.90
	경제성장률	9.30	8.40	5.00	5.60	8.20

資料：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指標集』, 1996.

IV. 맺음말

北韓의 經濟開發戰略의 特徴은 저렴한 農産物가격에 의한 農業部分의 잉여, 저임금에 의한 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를 가지고 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農민, 도시노동자 兩側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그 과정은 먼저 協동조합의 所有制와 分

配制度의 문제 때문에 농민의 근로의욕이 크게 저하되었고, 그 결과 농업생산은 停滯되었다.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해 총생산물 가운데 차지하는 총소비분은 계속 증가했다. 인민들의 低消費의 결과인 蓄積分은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에 주로 투자되었고, 企業管理體制 등의 문제로 인해 생산은 停滯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메커니즘이 國家經濟를 전반적인 危機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한은 최근 외국인직접투자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의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혁 없는 개방의 한계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때문에 그 성과가 부진하다.⁵⁾

그러면 北韓經濟의 循環構造의 痲痺를 풀 수 있는 根本的인 解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發端인 農村의 經濟體制改革, 農·輕工業을 위한 重工業, 國營企業의 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惡循環構造를 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補完的인 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1992년 自由經濟貿易地帶 設立 이후 現在까지 交換된 合意書나 契約書는 100여건, 締結된 投資總額은 3억5천만달러이나 實際投資된 金額은 2천만달러에 불과하다.

▷ 參考文獻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담보」, 『근로자』, 1989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1995.

金正基, 「朝鮮の對外經濟關係について」, 『月刊朝鮮資料』, 第30卷 第4號, 1990. 6.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月刊朝鮮資料』, 第33卷 第2號, 1993. 2.

김철규, 「계획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특징」, 『로동신문』, 1985. 2. 12.

朴貞東, 『現代 中國經濟論—經濟特區의 經濟的 效果』, 法文社, 1993.

——, 『經濟特區の總括』, 新評論, 東京, 1996.

室岡鐵夫, 「對外經濟政策の緩慢な轉換」, 玉城素·渡邊利夫(編), 『北朝鮮—崩落か, サバイバルか』, サイマル出版會, 東京, 1993.

尹基福, 「自立的民族經濟にもとづく自主的な合營法」, 『月刊朝鮮資料』, 第24卷 第12號, 1984. 12.

尹基貞,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1987年度 國家豫算執行の決算と 1988年度 國家豫算について(最高人民會議 第8期 第3回 會議で行なワに報告)」, 『月刊朝鮮資料』, 第28卷 第5號, 1988. 5.

- Byun, Dae-Ho,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he Juche Ideology and the Challenge of Gorbachev's New Thinking*,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1.
- Merrill, John, "North Korea's Halting Efforts Economic Reform", Chong-Sik Lee and Se-Hee Yoo(eds.), *North Korea in Transition*, Institute of 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 Moiseyev, V. I., "USSR-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Economy organized by KDI-Korea Economic Daily News, 1991. 9.
- Park, Jung-Dong, *The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ir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Praeger, forthcoming.
- UN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Pyongyang, 1991. 10.

論 評

吳 承 烈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朴貞東 박사의 논문 「北韓의 經濟開發戰略의 構造的 問題點」은 북한 경제개발 전략의 문제점을 A. W. Lewis의 이중구조적 저개발국가 발전모델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북한경제의 문제점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함’이라는 획일적 표현으로 묶어 버리고, 주로 數量的 評價에 의존하여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을 지적해 온 기존의 접근방법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정책을 경제발전 전략의 선회로 파악하고 있다. 즉 북한이 과거의 자력갱생노선으로부터 서방측 의존형의 경제노선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저자는 도시·농촌 2부분 경제개발모델을 응용하여 북한이 더 이상은 국내자원 동원(mobilization)에 의지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이고, 나진-선봉 건설계획의 정책적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도시·농촌 양부분의 축적자금이 모두 고갈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나,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구조 조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국내자원 동원에 의한 북한경제 개발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협동적 소유 및 분배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체계상의 문제와 과잉노동력을 활용하여 축적된 자금이 비효율적인 중공업부문에 과도하게 투자되었

다는 점을 북한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경영의 비효율성과 인구적 요인 또한 부정적인 성장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원으로서 단지 임시적 기능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저자는 북한의 자금배분구조를 왜곡시키는 경제체제적 결함의 개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자금조달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朴貞東 박사의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보아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석틀과 관련, 노동력의 무제한 공급, 도시 자본가의 이윤 극대화 행위 등의 가정하에서 巨視的 變數를 통해 시장경제체제하의 저개발국가 경제발전 형태를 묘사하고 있는 Lewis모델의 적용이 적합한 것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농촌인구의 비율이 약 5.5:4.5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동력부족 문제에 직면해 왔다.

둘째, Lewis의 저개발시장경제에서는 농촌으로부터의 무제한적 노동력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부문 생산자가 한계생산력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재투자할 수 있으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과잉고용노동력의 복지도 책임져야 하므로 실질적인 총투자규모의 파악은 실증적인 문제이며 事前的 판단이 불가능하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인센티브체제의 결함 및 기업운영의 효율성 등 微視的 變數와 군사 및 중공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산업정책적 문제점을 북한 경제발전전략 실패의 주요변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회주의 경제체제 결합과 관련된 변수들이며 Lewis의 이중구조적 발전모델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 및 정책함의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분석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논문주제는 북한의 ‘자본축적구조’와 ‘경제개발전략’의 動態的 연관성 및 경제성장 파급효과이므로, 결론으로서 실증적 분석 및 판단에 근거한 북한의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보완될 수 있다면 논문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논문에 인용된 북한의 인구성장률은 북한과 비슷한 발전 단계 국가기준으로 본다면 높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성장률을 최근의 식량난과 경제난의 한 요인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朴 濟 勳

(仁川大 教授)

저자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諸特徵을 분석하는 데 있어 “低開發社會主義에 있어서 농촌·도시 2부분 경제개발모델”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 상호간의 비교를 논하는 비교경제체제론만으로는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의 市場經濟와 行政制度, 그것과 병행해서 존재하는 관습경제 등의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A. W. Lewis의 이중경제형 개발모델을 低開發社會主義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저자 나름대로 수정한 것이라는 同 모델의 핵심은 都市와 農村 양부문에서 총생산물 가운데서 가능한 한 축적분을 늘려서 그것을 차기의 생산확대를 위해 사용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20년대 소련의 공업화논쟁에서 제기된 프레오브라

젠스키(E. Preobrazhensky)의 불균형성장모형을 상기시킨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農業과 輕工業에 대한 투자의 단기혜택보다는 重工業에 대한 투자의 장기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업,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공업에 대해 투자를 집중시키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과 선진자본주의 국가와의 기술격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본재 분야의 生産能力(capacity)을 단기간에 크게 증대시키는 ‘big-push’ 전략이 긴요하다는 논리이다.¹⁾ 결국 스탈린에 의해 소련의 공식 경제발전전략으로 채택되어 이후 소련형 經濟發展모형(Soviet Model) 또는 스탈린 모형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同 不均衡成長모형은 전후 제3세계 후진국 경제발전모형의 하나로서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많은 나라에서 모방·수용되어 왔다.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소련형 모형을 가장 모범적으로 답습하여 성공한 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련형 모형이 지금은 비효율의 누적에 따른 체제실패(system failure)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적어도 60년대까지는 分配의 衡平과 고도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성장 및 발전전략의 하나로 평가되어 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련형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 적어도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또는 외연적 경제성장단계에서는 노정되지 않았거나 순기능적인 면이 역기능적인 면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1) 同 모형을 수리적으로 엄밀하게 발전시킨 것이 당시 소련 국가계획위원회를 위해 제안됐던 Fel'dman 成長모형이다. 同 모형은 장기적으로 經濟成長率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이 소비재보다는 투자재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P. R. Gregory & R.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Harper & Row, N. Y., ch. 3, 1974 참조. 또는 E. Domar, "A Soviet Model of Growth,"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N. Y., 1957, pp. 223~261 참조.

따라서 後進國開發모델로 제시한 Lewis의 이중경제형개발모델을 사회주의국가, 그 중에서도 8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중진국 수준에 있던 북한의 경우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시작한 50년대 중반의 북한경제가 저개발국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더라도, 당시 북한은 Lewis의 경제개발 모델보다는 자기들의 중주국이 권고한 소련형 경제발전모델을 충실히 모방·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저자는 북한의 경제개발 실패의 요인으로 협동농장의 소유제, 분배제의 문제로 인한 농민의 근로의욕의 상실,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라는 투자정책, 북한기업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인구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경제 문제점의 근원은 사적소유의 부재에 따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고유한 모순 외에 외연적 不均衡成長戰略의 한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논리로 바꾸어서 정리할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한 2부분모델의 Lewis 모델과의 차이는 사회주의적 소유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적어도 초기 經濟開發段階를 벗어난 후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분야에서도 사적소유 부재로 인한 效率性低下가 나타난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다. 저자는 낮아지지 않고 있는 인구증가율을 북한 경제문제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논문의 <表 4>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한국과 비교할 때는 높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도 年 1.61%에서 1.36%로 분명히 낮아지고 있다. 북한경제의 문제는 오히려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낮은 인구증가율은 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總生産物 가운데 消費보다는 蓄積(저축)을 늘리도록 하는 압력을 증가시켜 결국 分配賃金의 몫을 줄여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악순환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볼 때 同 모델은 북한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

했던 초기 경제개발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저자는 북한경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경제체제론보다는 경제발전론적인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개도국을 위한 별도의 경제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²⁾을 지적함으로써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2) *The Economist*, April 27th 1996, p. 64 참조.